

충남의 녹색뉴딜 사업과 추진전략

정종관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1. 녹색 뉴딜사업의 방향

정부가 2009년 1월 6일 발표한 녹색 뉴딜사업은 잠재적 신성장 동력으로서 환경을 상징하는 '녹색' 과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 대책인 '뉴딜' 의 조합 용어이다. 당장 일자리 문제에 숨통을 틔와 동시에, 중장기적인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즉, "녹색 뉴딜=급한 일자리+친환경 성장" 을 목표로 하는 한국형 뉴딜이라 할 수 있다.

근시안적이고 산발적인 일자리 정책이나 경기 부양책에서 벗어나 '한국형 뉴딜' 사업의 전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방향성은 비교적 잘 잡았다고 본다. 그렇지만 내용은 포장의 화려함에 미치지 못한다. '녹색' 이라는 범주에 집어넣을 수 있는 지금까지의 대책들이 총망라된 수준일 뿐,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새로운 녹색 비전은 찾아보기 어렵다. 즉 임기 내 창출하겠다는 96만개 일자리도 대부분 토목공사에 투입되는 단순 노무직에 불과하다. 그래서 "정작 녹색은 없고 토목공사만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1.1 녹색 뉴딜사업의 배경과 의미

현 정부에서 녹색이 화두로 떠오른 것은 2008년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오면서 부터다. 관건은 콘텐츠인 데 추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정책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 위기가 본격화하면서 '녹색성장' 에 연연할 여유조차 없어졌다. 날로 추락하는 경기 앞에, 당장 서민들의 일자리를 챙기는 게 더 다급했다.

정부가 내놓은 '녹색 뉴딜사업'은 이 두 가지 필요성이 맞물린 결과다. 즉 저탄소, 친환경, 자원 절약 등 녹색 성장전략에 당장 시급한 일자리 창출 정책을 덧씌운 것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합동 브리핑에서 녹색 뉴딜사업을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 등 다목적사업"이라고 정의했다. 일자리 창출이 단기적으로 중요하지만 일반 복지 지출의 경우 남는 것이 없는 반면, 녹색 사업을 통해 SOC 투자 지출을 하면 발전의 동력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 복지 지출보다 배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큰 틀에서 보면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면서도 잠재 성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녹색 뉴딜사업이 한국형 뉴딜 정책의 하나로 적합한 방안이 될 수 있다.

1.2 녹색 뉴딜사업의 한계와 보완책

녹색 뉴딜사업이라는 용어의 명확한 정의는 어렵지만, '녹색'이 향후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비전 제시는 다소 미흡한 게 사실이다. 기존에 발표한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 신성장동력 대책 등과 중첩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경부·호남 고속철 조기 개통이나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 등 녹색의 범주에 무리하게 끼워 맞춘 내용도 있다.

일자리 대책도 기존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다. 임기 내 96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지만, 이중 90만개 이상이 건설이나 단순 생산직이다. 그나마도 최근 토목공사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게 떨어진 점을 감안하면 많이 부풀려져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5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지가 관건이다. 2009년 예산에 반영된 4조 3,626억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45조원 이상을 향후 조달해야 한다.

더구나 예산의 90% 이상이 2010~12년에 집중 투입되기 때문에 자칫 경기 회복기에 과잉 투자에 따른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향후 재정 건전성 악화, 고용 창출 효과 저하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진정한 녹색 성장으로 갈 수 있도록 내용을 보강해 나가야 한다.

1.3 녹색 뉴딜사업의 기본조건

녹색 뉴딜사업은 기존의 성장패러다임을 부정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발전전략이므로 몇가지 기본조건이 요구된다.

- ①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양극화 해소
- ② 사회안전망 강화
- ③ 요소투입 위주의 경제성장을 지양하고 자립 기반을 강화

루즈벨트 대통령이 추진한 뉴딜사업은 미국사회에 만연해 있던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고, 주요방법 중의 하나가 전후 복구의 상황 속에서 SOC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었다. 실제로 1930년대까지 미국사회는 기나긴 “도금시대”를 유지해 오면서 빈부격차가 크게 벌어졌고, 사회안전망이 취약하여 사회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끊임없이 시도되었다. 따라서 뉴딜사업의 결과 역시도 “부유층과 노동자계급의 소득격차가 급격히 줄고, 노동자 사이의 임금차도 줄어든 현상”을 가장 강조하고 있고, 1932년 위스콘신주가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부터 시작된 사회보장제도의 강화가 실질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뉴딜 정책은 구호대책, 경기부양책, 개혁조치 등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흔히 구호대책은 적어도 당면 목표를 달성했다 할 수 있고, 개혁조치는 장기적·제도적 효과를 가졌으나 경기부양책은 그다지 성공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이유로 경기부양책은 미미했으며, 비효율적인 투자에 치우쳐서 당시의 경험은 공공 투자를 확대하는 케인즈 이론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결과가 되었다. 이러한 뉴딜의 교훈으로 저소득층 소비수요 지지와 미래지향적 투자 위주의 과감한 부양책과 위기의 근원을 제거하는 철저한 개혁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뉴딜사업은 일자리 창출용 대규모 공공투자 사업”이라는 토건국가식 인식의 한계를 벗어나, 역사발전의 세 가지 기본축(triple bottom line)인 환경·경제·사회의 조화가 전제되도록 지속성의 관점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14 분야별 녹색뉴딜

1) 수송분야의 녹색일자리 창출

수송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30%를 차지하면서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선진국에서도 수송분야에서 대안적인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동을 줄이는 공간계획, 자가용 운행을 줄이는 목표의 설정, 대중교통의 실질적인 활성화 등이 주요대책인데, 고속철도 조기완공 등 대규모 토목사업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다. 영국의 경우 도로 교통감소법안을 마련하여 도로교통량을 10%를 줄이는 대신 자전거, 버스, 철도여행의 증가를 통해 130,000개의 직접적인 고용을 창출하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그런데 영국에서 이러한 수송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유가의 지속적인 인상, 장거리 운행자에 대한 세금감면이라는 왜곡된 인센티브 제거, 도시주차의 2/3에 이르는 자가용 통근을 조장하는 작업장 내 무료 주차혜택을 없애기 위한 세금 도입” 등이 제도적 장치로 제시되었다.

2) 수자원 확보와 수요관리

유럽과 캐나다(댐건설보다 수요관리가 30%이상 고용효과가 크다고 보고됨)의 사례를 보면 공급차원의 식수전용댐 건설 등의 수자원 확보보다 수요관리 차원의 누수율을 줄이는데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고용효과가 크다는 것이 밝혀져 있다. 유럽에서는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 누수탐지반을 고용하고, 관로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여 고용을 늘리고 있으며, 하수처리 역시 같은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고, 나아가 하수슬러지와 가축분뇨, 음식물 등 유기성 폐기물을 섞어 유기비료와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고용도 늘리고 있다.

3) 에너지 기기도입과 효율향상

녹색 뉴딜사업의 기본조건이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기에 새로운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에너지 빈곤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해야 한다. 이러한 에너지 복지사업으로는 미국의 WAP사업, 영국의 Warm Front 사업 및 CHP사업 등은 저소득층의 에너지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환경 일자리를 창출하는 오래되고 모범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방식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사업이 훨씬 더 고용효과가 크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다.

미국의 사례와 현재 진행 중인 집수리사업을 검토한 결과 1억원당 5.2~5.6개의 사회적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에서 창출가능한 총 일자리수는 풍력의 경우 약 6,000~9,400 여개 정도(해양풍력의 경우 9,100여개), 태양광은 약 50,000개 남짓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런 계산에는 제조가 모두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100% 수입에 의존한다면 건설과 유지 및 보수와 관련된 일자리만 생길 것이므로 창출될 일자리 수는 상당히 적게 된다. 바이오매스의 경우에는 현재 발생하는 축분을 음식물 폐기물과 혼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접근만으로도 3만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중앙정부의 녹색 뉴딜사업

2.1 주요 사업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추진하려 하는 녹색 뉴딜사업에서도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녹색 뉴딜사업을 녹색 SOC, 저탄소·고효율 산업기술, 친환경·녹색생활로 나누고 총 9개 핵심사업과 27개의 연계사업을 녹색 그린사업으로 선정하였다. 9개 핵심사업에는 4대강 살리기, 녹색교통망 확충,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 우수유출시설 및 중소댐, 그린카 및 청정에너지 보급, 폐기물 자원 재활용, 녹색 숲 가꾸기, 그린홈·그린스쿨사업, 생태하천(eco-river) 조성사업이 포함되어 있다(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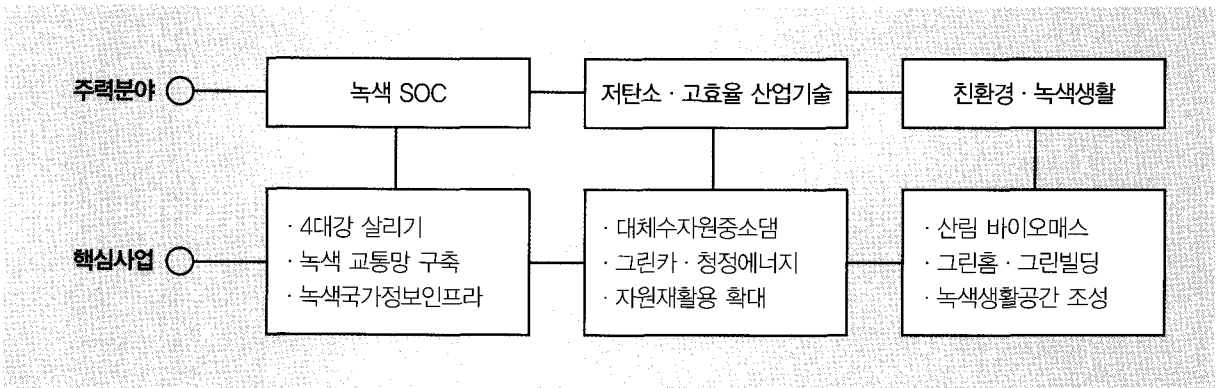


그림1 녹색 뉴딜사업의 주력분야와 핵심사업 (자료 : 기획재정부, 2008, 국무회의의 보고자료 재구성)

정부는 녹색뉴딜사업에 2012년까지 총 50조 49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95만 6,42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9대 핵심사업에는 총 예산의 78.7%인 39조 3,790억원이 투입되어 총 일자리의 55.8%에 해당하는 53만 3,464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2 녹색 뉴딜사업과 에너지

영국의 신경제학 재단에서 나온 보고서에는 현재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녹색 뉴딜의 핵심은 에너지체제의 전환이며 이를 위해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미국 오바마정부 또한 이러한 흐름에 부합되게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라는 새로운 시대적 과제 앞에 녹색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청정에너지 개발에 해마다 150억 달러씩 앞으로 10년 동안 1500억 달러를 들여 일자리 50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빈곤한 가정의 청소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의 경기부양책에도 인프라 투자가 포함되어 있지만 전체 경기부양예산 금액의 10%정도에 불과하며 (중산층 감세, 교육, 의료보장, 실업자 지원 등이 큰 항목임), 녹색 뉴딜처럼 대형 토목사업이 아니라 학교, 도로, 교량 등의 보수 위주로 되어 있어 경제적 효율성이나 일자리 창출 면에서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추진되는 녹색 뉴딜사업은 이러한 지향과는 차이가 있다. 일단 정부는 뉴딜사업 자체를 다른 식으로 인식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녹색뉴딜사업 추진방안에는 “뉴딜사업의 본질은 일자리 창출용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듯이 뉴딜사업의 핵심은 테네시강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기보다 사회보장제도와 연금제도, 노동조합 설립 지원, 실업수당, 장애인 보조, 부유세법 도입을 비롯한 세제 개혁 등 자유주의 경제에 대한 국가개입의 확장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를 “잊혀진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거래(new deal)”라고 의미를 부여하였다.

한편 녹색성장의 핵심이 되어야 할 신재생 에너지 연구개발 예산은 2012년까지 3조

원에 불과하다.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사업은 저탄소 고효율 산업기술이란 분야로 분류되고 그 중에서도 그린카·청정에너지 보급이라는 하위부문에 속한다. 그런데 <표 1>에 제시된 것처럼 그린카·청정에너지 보급 분야의 핵심사업은 그린카 보급 확대이다. 그린카·청정에너지보급 분야의 57.7%의 재정이 그린카 보급사업 하나에 배정되어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7,391억원이 배정되어 있고 그 외에 바이오 에탄올연료의 자동차 영향평가 및 기술개발(30억원), 바이오 에탄올 연료 시범보급사업(212억원), 바이오-ETBE 실증평가 및 시범보급사업(60억원)이 있다. 이 외에도 에너지 관련 사업은 자원 재활용확대와 산림 바이오매스 이용확대, 에너지절약형 그린홈 건설 공급 프로젝트

표 1 녹색 뉴딜사업의 에너지관련 예산 (단위: 억 원, 괄호는 %)

사업명	예산
그린카 청정에너지 보급	22,765(4.5)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7,391(1.5)
바이오에탄올 연료자동차 영향평가	30(0.0)
바이오에탄올 연료 시범보급	212(0.0)
바이오-ETBE 실증평가 시범보급	60(0.0)
산림 바이오매스 이용확대	33,232(6.6)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촉진	881(0.0)
자원재활용 확대	28,628(5.7)
폐기물 에너지화 확대	9,300(1.9)
초본계 해양계 바이오매스에너지화	11,220(2.2)
바이오매스 활용 생산기반 구축	758(0.0)
가축분뇨 자원화와 에너지 활용	2,050(0.0)
에너지관련 사업 소계	31,902(6.4)
녹색뉴딜사업 총계	500,492(100)

트 추진 사업부문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관련되는 사업들을 정리해보면 <표 1>과 같다.

<표 1>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에너지 관련 사업에는 총 소요예산의 6.4%만이 투입될 뿐이며 이 중에서 초본계 해양계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사업과 폐기물 에너지화 확대에 에너지 관련 예산의 64.3%가 투입된다. 앞서 기술했듯이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은 재생가능성과 환경친화성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폐기물 감량이라는 원칙과 갈등관계에 있다. 폐기물에너지가 비중으로는 2008년 현재 73.7%에서 2030년에 33.4%로 절반이상 감소한다 하더라도 양에 있어서는 2008년 468만 8천TOE(석유환산톤수)에서 2030년 1,192만 1천 TOE로 2.4배나 늘어나는 것으로 목표량을 잡고 있다.

3. 충청남도의 녹색 뉴딜사업

3.1 추진방향

중앙정부의 녹색 뉴딜사업을 지역 실정에 맞게 분야별로 발굴하여 신속하게 시행하면서 지역차원에서 공공재정의 조기 집행을 통해 경제난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녹색성장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한 추진방향으로는 중앙정부의 사업계획을 최대한 유치할 수 있도록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발굴 및 실현 가능한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적 뒷받침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한다. 지역적으로는 도내 전역에서 일자리 창출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사업을 고르게 배분하여 추진한다.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과 연계하여 장기과제를 발굴한다. 왜냐하면 사업은 환경성을 전제로 하며, 연속성 차원에서 경제가 어느 정도 호전되었다고 해서 뉴딜 사업이 중도에 포기된다면 진정한 의미의 녹색 뉴딜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선순환 또는 병행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제를 시장 메카니즘으로 복원시키기 위한 비상조치로 사회간접자본과 환경기반 강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는 환경만의 논리를 강조할 수만은 없다. 녹색뉴딜사업에 대한 도·시·군 공무원의 이해 확산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 초청 특강을 통한 사업의 이해와 담당자의 역량구축에 중점을 둔다. 그리고 충남도의 중점프로젝트인 도청이전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신규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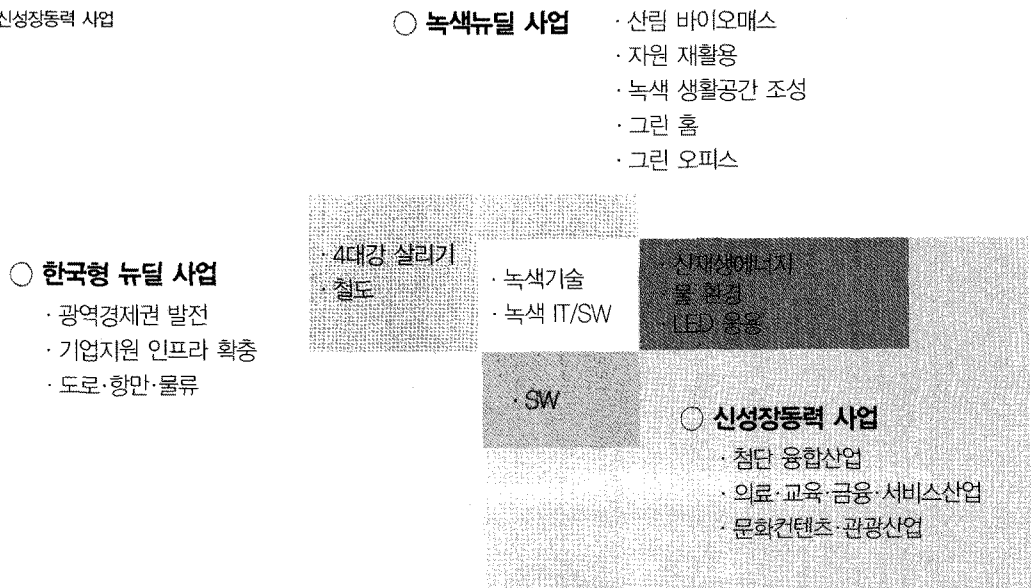
개발지역의 관련 사업에 적극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충남 녹색뉴딜의 포괄적 범위와 성격은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으로 선정하고 있다.

- ① 에너지 절약, 자원재활용 및 청정 에너지 개발 등 자원절감형 경제 구축 사업
- ② 녹색 교통망 구축, 맑은 물 공급 등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
- ③ 탄소 저감, 수자원 확보 등 지구 장애와 차세대 안전을 위한 선제적·예방적 사업
- ④ 산업·정보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등 미래대비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사업

이러한 기초 하에서 다른 분야 정책 및 전략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립할 수 있다. 녹색뉴딜사업은 ①「한국형 뉴딜」과 「신성장동력」사업중 녹색 연관성과 성장·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 ②여타 녹색사업 중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뉴딜사업이 일자리 창출용 대규모 공공투자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공공부문의 투자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그림2
녹색 뉴딜사업과
신성장동력 사업



3.2 추진내용

주요 추진내용으로 사업기간은 2009~2012년(4년간)이며, 48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전체 사업비는 89,143억원인데 국비 67,184억원(75.4%), 지방비 14,370억원(16.1%), 민자 7,589억원(8.5%)으로 배분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연평균 22,286억원이 투입되고, 사업별 평균 투입규모는 1,857억원이다. 충청남도의 녹색뉴딜 사업비는 중앙정부 사업비 500,492억원의 17.8%를 점유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한 일자리는 159,364개를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목표 기간 2013년 이후에는 4,302억원을 투입하여 추가적으로 8,526명의 일자리창출이 연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2
충청남도의 녹색뉴딜
핵심사업 및 일자리 창출효과
(단위 : 억원, 명)

구 분	단위사업	사업비				일자리
		합계	국비	지방비	민자	
합 계	48	89,143	67,184	14,370	7,589	159,364
금강 살리기 및 주변정비사업	5	74,529	60,422	6,844	7,263	124,506
녹색교통망 구축	13	1,491	1,005	486	-	2,469
녹색국가 정보인프라 구축	3	435	271	154	-	614
대체 수자원 확보 및 친환경 중소댐 건설	2	353	205	148	-	535
그린카·청정에너지 보급	4	904	804	72	28	877
자원재활용 확대	4	1,956	704	1,156	96	3,008
산림 바이오매스 이용확대	10	6,384	1,732	4,488	164	22,767
에너지 절약형 그린홈, 오피스 및 그린스쿨 확산	4	1,105	855	226	24	1,251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 조성	3	1,986	1,176	796	14	3,3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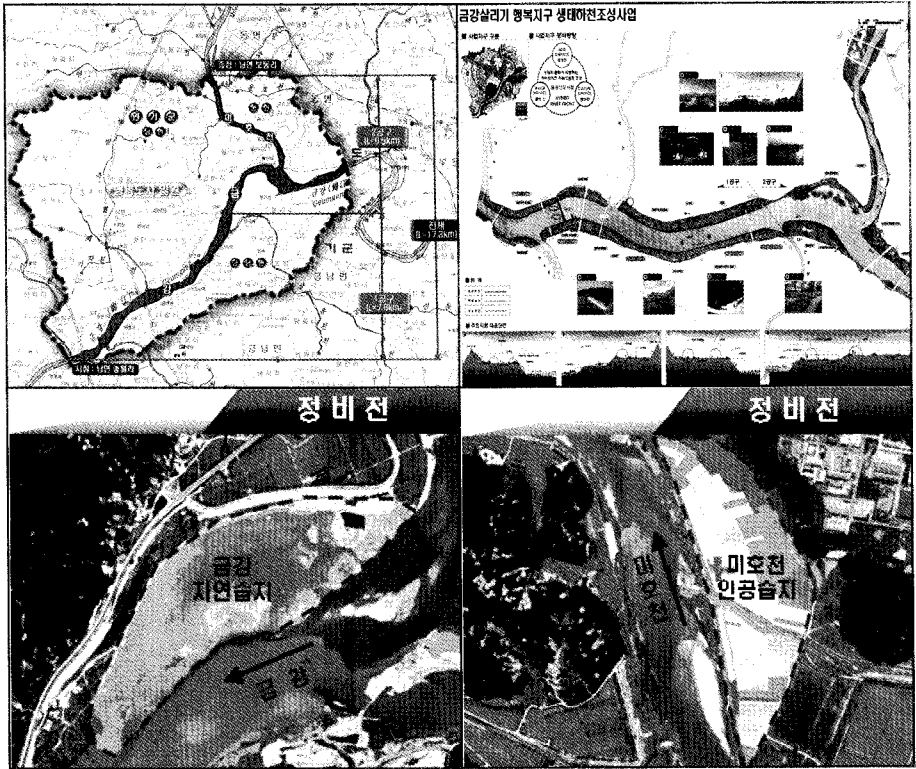
3.3 중점사업

1) 금강 살리기

- 사업비 : 69,000억원(국비 57,132, 지방비 4,830, 민자 7,038)
- 일자리 : 114,539개
- 주요내용으로는 홍수에 안전하면서 맑은 물과 풍부한 생태계를 활용한 문화레저 활동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천정비, 제방보강, 홍수조절지, 농업용댐 재개발, 신규댐, 천변저수지, 자전거길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금강살리기 행복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연기군 금남면 일원의 금강과 미호천 하류지역 17.3km에 대해 자연형 하천정비, 제방축조와 보강, 생태·문화·예술 공간으

그림3
행복지구 생태하천 조성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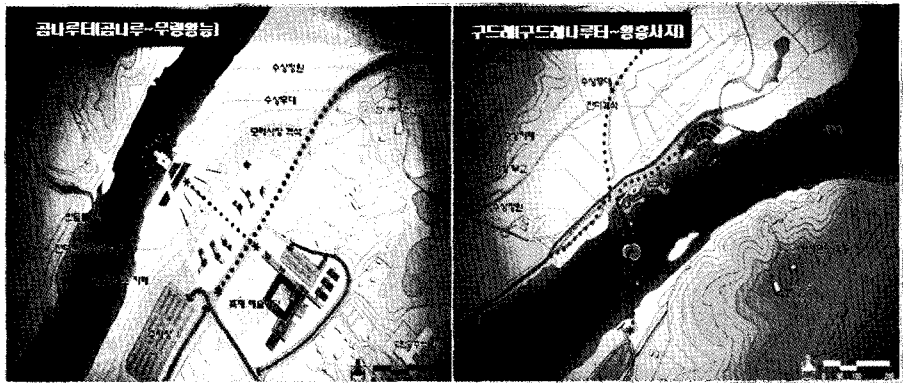
로서 친수공간 조성, 생태학습장 및 관찰데크를 포함하는 인공 및 자연습지 조성, 가동보(可動漕)와 어도를 포함하는 수중보 건설 등이 포함된다. 사업기간은 2009년 6월부터 2011년말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는 2,045억원이다.

인공습지 조성사업은 430천㎡에 대해 수질정화식물 식재로 수질정화효과를 얻고 세종시 유지용수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생태학습장과 관찰데크 설치로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자연습지 복원은 금강본류 미호천 합류구간에 대해 골채취 후 방치된 공간을 자연습지로 복원하고 생물서식처로 제공하여 생태계복원과 관광자원화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2) 생태해안관광 자전거도로망 개설

- 사업비 : 508억원(국비 356, 지방비 152)
- 일 자리 : 843개
- 주요내용으로 사업규모는 총연장 127km인데, 앞으로 건설되는 보령-안면 연육교와 안면도 관광지를 관통하는 자전거 도로 개설하고 보령시와 태안군, 서산 A·B지구를 연결하는 환상형 벨트 조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서해안의 관광 명소와 및 자전거 도로 경주 유치 등 지역경제 활력화 도모에 역점을 둔다.

그림4
금강 역사문화유적 정비 사업



3) 백제역사테마관광 자전거도로망 개설

- 사업비 : 100억원(국비 72, 지방비 28)
- 일 자리 : 168개
- 주요내용으로 사업규모는 총연장 20.7km이며, 부여군에 산재한 백제문화 유적지를 연결하여 자전거 탐방코스를 개발한다. 기존 개설된 자전거도로 47km를 연결하여 새로운 관광상품을 육성하고 클린 탐방코스를 상품화하여 저탄소 문화유적지를 복원한다. 역사·문화·삶이 어우러지는 금강의 부활을 목표로 하여 옛 나루 및 포구를 복원하여 친수적 하천관광을 육성하고 금강유역의 전통문화 창출을 위해 문화유적 보전과 활용을 위한 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2010년 대백제전 연계사업으로 곰나루, 구드레 나루 관광기반 조성사업은 사업비 4,229억원 규모로 추진할 예정이다.

4) 농어촌테마공원(애향공원)조성

- 사업비 : 3,200억원(전액 지방비)
- 일 자리 : 4,704개
- 주요내용으로 마을단위 소공원, 근린공원, 전통고유수종 식재, 향토수종 식재 등이 있으며, 사업비는 전액 지방비를 투입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건전한 생활 녹지 및 주민편의 공간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5) 그린에너지를 활용한 전기자동차 핵심기술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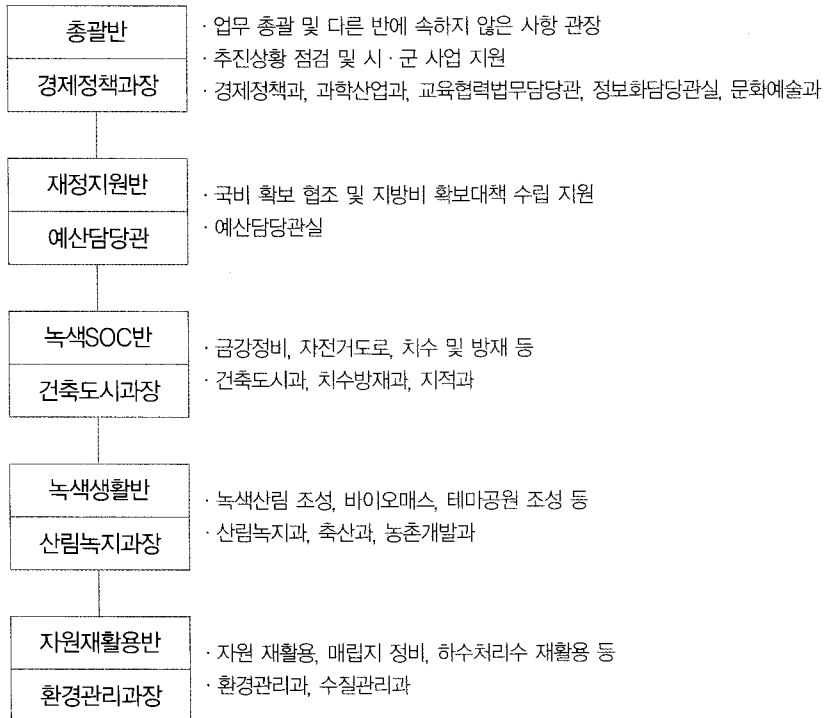
- 사업비 : 318억원(국비 290, 민자 28)
- 일 자리 : 466개
- 주요내용으로 친환경 전기, 연료전지자동차(FCV)의 성능 평가기반을 구축하여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자동차 운행시스템 기술개발에 역점을 둔다. 이를 통

해 그린카 공용 핵심부품 기술개발로 부품경쟁력 제고 및 新성장산업을 육성하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다.

3.4 녹색뉴딜 조직 구성

운영 중인 비상경제상황실의 지역경제팀 업무와 연계하여 9개 핵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5개 반으로 편성하였다. 팀장은 경제통상실장이 되고 반장은 관련 실국 주무과장으로, 반원은 소관과의 업무를 추진하는 사무관으로 구성하였다. 추진상황 보고회 정례화 운영을 위해 비상경제상황실장 주재 보고회는 격주 1회, 팀장 주재 보고회는 매주 1회로 하고 있다. 그리고 유관기관간의 보고 및 협조는 시·군·도, 행정안전부 간의 상호 연결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조직 및 기능



충남의 녹색 뉴딜사업 개선방향

1) 녹색 뉴딜사업 평가지표

중앙정부에서 녹색 뉴딜사업으로 에너지 절약, 자원재활용 및 청정에너지 개발 등 자원 절약형 경제 구축 사업, 녹색교통망 구축, 맑은 물 공급 등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 탄소저감, 수자원 확보 등 지구 장래와 차세대 안전을 위한 선제적·예방적 사업, 산업·정보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 등 미래대비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사업 등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체계에서 볼 때 정부에서 발표한 사업은 2008년 8월에 선포된 '녹색성장 비전'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 녹색 뉴딜 사업을 포장만 달리한 대규모 토목사업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는 녹색성장 사업 인식 및 평가지표가 함께 제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1992년에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UNFCCC)이 체결된 이후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각종 방안을 마련하여 실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 이후 의무감축 국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녹색성장사업의 추진을 통해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녹색 뉴딜 사업도 사업효과 분석시 고용효과, 생산유발효과 외에 각 사업이 얼마의 온실가스를 저감하는지, 그에 따른 환경비용 감소효과는 얼마인지 등 녹색성장지표의 개발과 적용 및 홍보를 전개한다면 훨씬 대국민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전국을 자전거 도로망으로 연결하는 계획은 일자리 창출 효과는 기대할 수 있겠지만, 이를 통해 과연 녹색교통이 활성화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지역 내에서는 자전거 도로가 연속성이 없어 자전거 타기가 불편한데, 건설계획을 수립할 때 운영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녹색교통 활성화 차원에서 의미를 가지려면 광역 자전거도로망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기존의 자전거도로 정비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2) 지자체 자원조달사업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금강개발사업에 의해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골재채취사업은 유보되거나 중단위기에 처해 있다. 대부분 어렵게 환경성검토를 마치고 사업허가를 받았으나 금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하여 영향을 받고 있다. 시군에서는 이러한 사업 수익금으로 금강 및 지류 하천정비 사업비로 쓰고, 경영 수익사업 평가에서 중앙정부에서 교부금까지 받았다. 충청남도의 경우 1996~2001년까지 금

강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연간 500~600만m³의 골재를 채취하여 600억원의 기금을 모았다. 이 기금으로 13년간 도내 536개 하천 가운데 70%를 정비했다. 기초자치단체별로 연기군은 2009년 1월 골재채취고시를 통해 320천m³에서 연간 18억원, 공주시는 환경성검토가 진행 중이나 447천m³, 청양군은 연간 400천m³에서 15억원, 부여군은 2008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460천m³에서 연간 31억원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차질이 예상되면서 재정수입 감소분에 대한 골재판매 사업권과 수익금 배분을 요구하고 있다.

3) 지자체 재정 조기집행

녹색 뉴딜사업은 정부의 공공 재정지출 확대로 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에 목적을 두기 있기도 하다. 그러나 공사비 3천만원 이상 규모로 2개월 이상공기가 필요한 지자체발주공사에 대해 계약과 동시에 최고 70%까지의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행보증금이 도급액의 0.9~2.2% 수준으로 부담이 있는데다가 공사기간중 원자재비 등 물가 상승분에 대해 보전(補填)받을 수 없고 선급금이 재무제표상 부채로 계상되는 점이 문제다. 물가상승분이 반영이 안 되고 공사가 끝난 뒤 사업비를 정산하면 이익이 더 크므로 부채까지 늘어나는 선급금을 찾을 이유가 없게 된다. 경기를 살리려면 업체가 선급금을 찾아가 시중에 자금이 돌아야하는데 현 제도 하에서는 채무와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수수료 완화와 채무계상 면제, 물가상승분 반영 등에 대한 후속조치가 따라야한다. 지자체별 전체공사 대금 대비 선급금 수령비율이 전국 평균 37%인데 충남은 346억원으로 49%를 차지하고 있다.

4) 지역 자체사업 발굴

충남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녹색 뉴딜 사업의 발굴은 기존의 사업 이외에 생태적 영향의 최소화, 훼손된 자연경관의 복원과 물질의 순환 원리를 적용한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다.

폐광산지역 사업은 석탄광, 금속광, 석면광 등 약 270여 개소에 대해 광해의 방지, 환경개선과 관광자원화를 통한 경제살리기와 연계한다. 지하수 폐공은 약 24,000공인데 이미 복구된 것을 제외하고 약 15,000공에 대해 지하수 오염방지와 지하수 모니터링 사업으로 정비한다. 금강하굿둑의 갑문개방을 통해 오염 퇴적물질의 축적을 방지하고 하구 기수역 조성으로 서천 신성리 갈대밭 등에 대해 생태습지와 교육기능을 강화한 생태관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산업단지 재개발 사업은 산업단지 재편으로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하수슬러지와 가축분뇨 및 음식물폐수 등 유기성폐자원의 에너지화 사업으로 수질오염방지와 신재생에너지 생산, 바이오 순환림 조성과 숲가꾸기 사업으로

얻어지는 부산물을 비닐하우스 시설재배지 특화작물의 난방연료로 공급하여 농업 생산원가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 대해 환경부하를 줄이면서 물질과 에너지의 순환, 고용창출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발굴이 가능해야 진정한 녹색 뉴딜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다.